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김덕기·김상진·이동임·정지운·정향진·주인중
최영렬·이창래·임경범·한애리·이동희·김윤아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 R I V E T

머 리 말

정부는 자격 제도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자격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1997년 3월 27일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민간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이 개발·운영되어 왔고, 이들 자격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나날이 증대해 왔다. 민간이 자격을 발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제로 「자격기본법」에 근거해 민간자격 공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민간자격 공인 제도는 무분별하게 생성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 간의 상호경쟁을 통한 질 관리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공인을 받기 위한 민간자격 관리자간의 과다 경쟁 유발 등 부정적인 면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민간자격 공인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 정부부처에서의 제도 지원, 일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사업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본 사업보고서는 2019년도 민간자격 공인 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조사·연구 과정과 결과 및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본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년도 기본사업 2019-06번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덕기 박사가 책임자로서 김상진 박사, 이동임 박사, 정지운 박사, 정향진 박사, 주인중 박사, 최영렬 박사, 이창래 전문원, 임경범 전문원, 한애리 전문연구원, 이동희 연구원, 김윤아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민간자격 공인 제도가 우리나라 자격 제도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부처 관계자, 조사·연구에 참여해 주신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201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	6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_19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21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29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37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	45
제3장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및 상담_47	
제1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49
제2절 민원 접수 및 상담	57
제4장 20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_65	
제1절 20년간(2000~2019년) 공인 신청 현황	67
제2절 20년간(2000~2019년) 공인 조사 결과	74
제3절 2019년도 기준 공인 민간자격 관리 현황 총괄	82
제4절 2019년도 조사·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 분석	87

제5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_91

제1절 20년간 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93
제2절 공인 신청 및 조사·연구 기준의 개선 ······ 96
제3절 공인 민간자격의 의의 및 성과 ······ 98
제4절 후속 과제 제언 ······ 100

참고문헌_103

표 차례

<표 2-1> 2019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25
<표 2-2> 2019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27
<표 2-3> 신규 공인 ‘서류 및 현장 조사’ 기준	31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2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35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39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40
<표 4-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68
<표 4-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72
<표 4-3> 평가 점수별 현황	75
<표 4-4> 공인 민간자격의 연도별 공인율 현황	79
<표 4-5> 공인 민간자격별 소관부처 현황	82
<표 4-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84
<표 4-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85
<표 4-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86
<표 4-9> 최근 7년간의 공인 조사 결과 분석	89

그림 차례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 8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 운영 구조	9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1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15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17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26
[그림 4-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69
[그림 4-2] 연도별 평가 점수 추이	76
[그림 4-3] 연도별 공인자격의 누계	81

요 약

1.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내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 제도가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개편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본법」(1997. 3. 27., 법률 제5314호)과 「자격기본법 시행령」(1997. 8. 9., 대통령령 제15453호)을 제정함.
-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에 민간자격의 공인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동법 시행령 제29조(공인 기간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제31조(공인 사항의 변경),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⑤항 등

- 또한 본 조사·연구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관 제4조(사업) 제5호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위한 검토 및 조사·연구”의 기관 정관에 따른 고유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째 지속 추진된 사업임.

- 이에 동 사업은 자격기본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해 제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추진 내용 및 절차

-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등 조사 체계 계획 수립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공고(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및 접수
- 공인 신청 접수 종목에 대한 신청 자격 및 법적 요건 검토(심사진)
- 신규 공인 신청 종목 조사
 - 서류 심사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장 조사 실시
-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신청 종목 조사(현장 조사 실시)
-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계,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심사 결과 정리 및 민간자격 국가공인 대상 종목 추천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 결과 주무부처 송부
- 변경 승인 신청 공인자격,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일부 면제 및 완화 검토 시행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및 승인
- 20년간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결과 분석
- 결과 분석을 통한 차기 연도 사업 추진 계획 절차 수립 및 보완
-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질 향상을 위한 연수 개최
- 공인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제언 및 향후 개선 방안 협의

3. 2019년도 민간자격 공인 신청 및 접수 현황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19. 3. 18.(월) ~ 3. 29.(금)

※ 변경 승인은 별도의 접수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접수하였음.

□ 신청 기관 및 종목

- 신규 공인 및 재공인(연장 포함): 80건, 63개 기관
 - 총 80개 종목 중 공인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및 연장 승인 접수 건은 39건(28개 기관)이며, 신규 공인을 신청한 자격 종목은 41건(35개 기관)임.
- 2020년 5월 이전에 공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자격 중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재공인 대상 종목은 총 39건(28개 기관)임.

4. 신규 공인 신청 대상 종목의 조사·연구

□ 조사·연구 개요

- 신규 공인 서류 심사는 민간자격 등록 여부, 공인 기준 충족 여부(1년 이상, 3회 이상의 검정 실적), 자격의 필요성, 자격 체계의 적합성, 조직 관리 및 운영, 자격 검정 및 취득자 관리를 중심으로 실시함.
- 신규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위원은 각 종목별 체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 내용 전문가 등 6~7인 내외로 구성함.

- 신규 공인 현장 조사는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40% 이상이며, 서류 심사 평가 점수(220점 만점)의 70%(154점) 이상을 얻은 종목에 한하여 실시함.
- 공인 적합 추천 기준: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40%) 이하가 없으며, 환산 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경우임(평가 점수 기준 보통 이상).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대상 종목: 41건, 35개 기관
- 대상 종목: 41건, 35개 기관
- 심사 기간: 2019. 5. 7.(화) ~ 6. 7.(금)
- 심사 위원 위촉 현황
 - 원내: 12명(각 팀 책임 9명, 지원 3인 포함)
 - 원외: 103명
 - 자격 종목별 검정 체제 심사 위원: 13명
 - 자격 종목별 재정 전문가: 1명
 - 자격 종목별 내용 심사 위원: 65명
 - 주무부처 담당자: 24명(기위촉된 26명 담당자 중 24명 참석)
- 서류 심사 결과
 - 현장 조사 대상 5개 종목(5개 기관) 선정

□ 현장 조사

○ 조사 대상

- 서류 심사 결과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40%) 이하가 없으며, 환산 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5개 종목, 5개 기관

○ 조사 기간: 2019. 6. 20.(목)~ 7. 12.(금)

○ 현장 조사 위원 위촉 현황

- 원내: 7명(각 팀 책임 5명, 지원 2명)
- 원외: 25명
 - 자격 종목별 검정 체제 심사 위원: 10명
 - 자격 종목별 내용 심사 위원: 10명
 - 주무부처 담당자: 5명(기위촉된 5명 담당자 중 4명 참석)

○ 2019년도 신규 공인 대상 41건 중 서류 심사 결과로 현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 2건, 미흡 3건으로 나타남.

5. 재공인 신청 대상 종목의 조사·연구

□ 조사·연구 개요

- 재공인 현장 조사는 기존에 공인받은 종목 중 2019. 5. 1.~2020. 4. 30. 기간 중 공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37개 종목(연장 승인 대상 1개 종목, 재공인 신청 철회 1개 종목 제외)을 대상으로 최근 신규 공인 및 재공인 당시의 수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함.

- 재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위원은 각 종목별 체제 전문가 및 주무부처 담당자 등 총 3~4인으로 구성함.
 - 공인 적합 기준: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40%) 이하가 없으며, 환산 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경우임(평가 점수 기준 보통 이상).
 - 2020년 5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9건 중 재공인 신청 철회 1건*, 연장 승인 대상 1건을 제외한 37건이 조사 대상임.
- *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문화회)

□ 조사·연구 결과

- 대상 종목: 37건, 26개 기관
- 조사 기간: 2019. 5. 13.(월) ~ 6. 13.(목)
- 심사 위원 위촉 현황
 - 원내: 12명(지원 3인 포함)
 - 원외: 57명
 - 자격 종목별 검정 체제 심사 위원: 12명
 - 자격 종목별 내용 심사 위원: 28명
 - 주무부처 담당자: 17명
- 2019년도 재공인 대상 현장 조사를 실시한 종목 37건 가운데 34건에 대해 공인 유효 기간 연장 추천의 결과가 나타남.
 - 한자급수인증시험 1건은 신청 기관 측의 신청 철회(2019. 6. 18.)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6. 재공인 연장 승인 대상 종목의 조사·연구

-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2항에 의거해 주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 없이 주무부 장관이 관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함.
- 연장 승인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2개 기관 이상)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 장관은 이를 참고하여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함.
- 2019년 연장 승인 대상 1건에 대해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 기관 등) 및 산업계 5개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5개 기관(단체)에서 대상 종목에 대한 의견을 회신함.
- 관련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에 송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주무부처에서는 재공인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7.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의

□ 변경 승인 심의

- 「자격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자격의 등급, 검정 기준,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응시 자격 및 유효 기간, 교육·훈련 과정의 과목

명, 이수 기간 및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항 제5호에 따라 공인 사항의 변경 승인과 공인 이전 취득자 일부 면제 및 완화 검토에 대한 심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공인받은 민간자격 중 6개 종목(6개 기관)이 검토 기준, 검토 과목, 검토 방법, 유효 기간 등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동 조사를 위해 해당 자격의 주무부처 담당자와 자격 종목별 체제 전문가 및 내용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함.
- 변경 승인 적합 여부 심의 결과 4개 종목의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2개 종목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주무부처 및 신청 기관에 해당 결과를 통지함.

□ 공인 이전 취득자 일부 면제 및 완화 검토 심의

-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인 자격 관리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인 이전 취득자에 대해 일부 면제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자격 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항 제5호에 따라 공인 사항의 변경 승인과 공인 이전 취득자 일부 면제 및 완화 검토에 대한 심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공인받은 민간자격 중 1개 종목(1개 기관)이 공인 이전 취득자에

대해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 계획을 신청함에 따라 동 조사를 위해 해당 자격의 주무부처 담당자와 자격 종목별 체제 전문가 및 내용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함.

- 완화 검정 심의 결과 1개 종목의 심의 신청 내용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였으며, 주무부처 및 신청 기관에 해당 결과를 통지함.

8. 제도 보완을 위한 개선 사항

□ 공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정부는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의 향상과 국가자격 간의 경쟁을 통해 자격 제도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공인 민간자격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 결과 다양한 산업 수요에 맞춰 민간자격이 운영되었고, 국민의 관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2019년 공인 민간자격 97개 종목, 공인자격 관리·운영 기관은 61개 기관에 이룸.
- 2010년 이후 공인 민간자격의 수는 약 100개를 유지하여 공인 민간자격 제도가 정체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됨. 이에 공인 민간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최영렬 외, 2016).
- 공인자격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인자격 취득자의 학점 인정, 채용 우대 등과 같은 다양한 공인 민간자격의 혜택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한편 등록 민간자격의 수는 현재 3만 개 이상으로, 등록 민간자

격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그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산업에 필요한 분야의 자격이 공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처별 지정 공모 방식 등에 공인 신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등록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필수 연수 제도 마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인자격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사항

- 공인 신청한 민간자격의 공인율은 2000년 12.9%를 시작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8년 3%(33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1개 자격 공인)로 가장 낮은 공인율을 기록하였으나 대체적으로 10% 전후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2019년의 공인율은 4.8%로, 41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2개 자격이 공인됨.¹⁾
- 반면 재공인 신청 종목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인 기간 연장 적합으로 판정되고 있는데, 이는 공인자격의 신규 진입은 어려우나 진입 이후 재공인 조사·연구를 통해 공인자격이 만료 혹은 취소되는 경로가 경직되어 있음을 의미함.
- 공인 이후 자격의 시행 및 관리 부분의 질 관리가 주무부처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무부처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공인 조사·연구 지적 사항 및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1) 2019년도 공인 결과는 현재 주무부처에서 최종 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2019년도 공인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최종결과를 확인하여 추후에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임.

- 따라서 주무부처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인자격의 질 제고를 위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인자격 관리자 연수를 통해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인자격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 공인자격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일부 공인자격의 만료와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해산 및 사업자 폐업 등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정보 관리 주체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정보 관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공인 신청 및 조사·연구 기준의 개선

- 공인 탈락 기관의 반복 신청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금년도에 신규 공인 신청한 자격 종목 중 2회 이상 신규 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은 27건으로, 이는 전체의 65.9%임.
 - 금년도 공인 신청 종목 중 약 43.9% 정도는 전년도 공인 신청에서 부적합을 받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 신청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자격 관리자가 전년도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인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인 부적합을 받은 기관의 반복 신청은 행정상의 비효율을 야

기할 뿐 아니라 공인 신청으로 인한 신청 기관의 자격 검정 업무에도 업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에 공인 부적합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 민간자격 공인 조사 기준에 대한 검토의 필요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공인 조사 기준은 연속성을 위해 비교적 일관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금년에는 자격 관리자의 운영 방식의 변화와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선을 실시하였음.
 - 위임위탁 여부, 재위탁 여부, 위탁 사유, 위탁 관리·감독 방식 등을 추가하여 위탁 업무에 대한 주체와 책임 여부를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정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정 항목 심사의 전문성을 높임.
 - 자격 검정료와 발급 비용을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검정료 지급 이후 자격 관리자의 사후 관리를 구체화하도록 함.
 - 이 외에도 자격 운영 방식, 신사업 및 정책 제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 조사 기준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10. 공인 민간자격의 의의 및 성과

- 공인 조사의 의의 및 성과
 - 국가자격만으로 직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공인 조사는 민간자격 중 산

업의 수요가 높고 관리 및 자격 수준이 우수한 자격 중 일부를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적 인력 양성 기제로 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인 조사는 공인의 기준을 국가자격 수준 또는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양질의 민간자격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특히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은 엄격한 기준과 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공인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공인 조사를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인 민간자격이 대내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공인 조사의 큰 성과로 파악됨.

11. 후속 과제 제언

-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공인 민간자격의 주체인 주무부처는 관리자적 입장으로 관련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인 민간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기능을 개선하며 민간자격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제1장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1. 연구 사업 추진 배경

-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격 수요가 생기고 있음. 이에 1997년 자격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 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며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기본법」이 마련됨.
- 「자격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당해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함께 그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다만,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일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민

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간자격 중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조사가 2000년부터 시작됨.

* 「자격기본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3항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3월 27일 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법률 제5315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설립 초부터 목적 사업으로 자격 제도, 특히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민간자격 제도의 국가공인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자격 분야의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민간자격 공인 조사를 전담으로 진행함. 특히 민간자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공인 민간자격 제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함.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인에 적합한 민간자격에 대해 매년 공정하게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민간자격 공인 제도는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 국가 차원에서의 민간자격 제도 활성화 지원,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 민간자격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 체제 도입 등을 유도하고 있음.
-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에서 질 높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효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자격 간의 보완 및

상호 경쟁을 통한 질 관리 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적 위상과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 첫째, 민간자격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함.
 -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의 발굴
 - 국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종목 발굴
 -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발굴
 - 특수 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발굴
 -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 문화 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발굴
- 둘째, 각종 전문직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공익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민간자격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지나친 영리성을 배제함.
- 셋째, 국가자격 수준에 준하는 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적용을 통해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제고함.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1. 「자격기본법」상 공인 조사의 주요 내용²⁾

- 정부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내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 제도가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개편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본법」(1997. 3. 27., 법률 제5314호)과 「자격기본법 시행령」(1997. 8. 9., 대통령 제 15453호)을 제정함.
-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에 민간자격의 공인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동법 시행령 제29조(공인 기간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 인정), 제31조(공인 사항의 변경),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항 등

- 이에 주무부 장관은 「자격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 신청에 따른 조사·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이를 위

2)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요약함.

탁·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된 조사·연구 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 조사·연구
- 재공인 신청 공인자격에 대한 재공인 현장 조사
- 연장 승인 신청 공인자격에 대한 유관 기관 의견 수렴
- 변경 승인 신청 공인자격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및 승인
-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및 승인

2. 본 과제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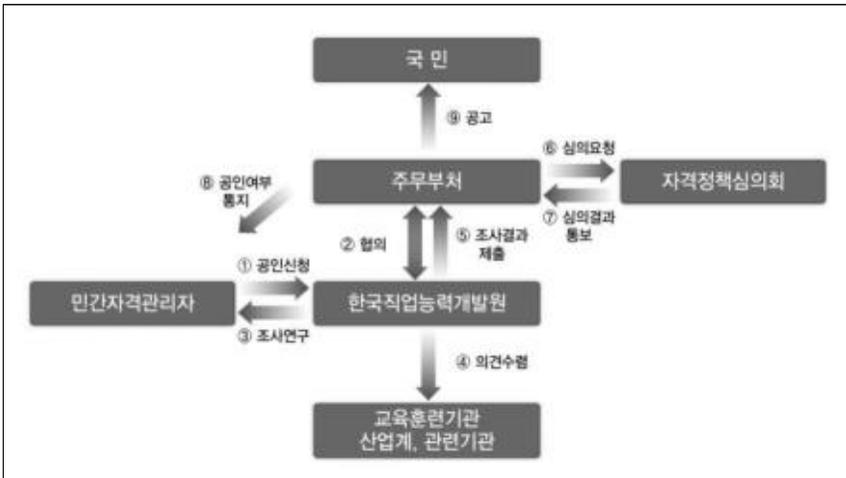
○ 동 사업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해 제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사업의 운영 구조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8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가.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 조사·연구 업무 수행

- 신규 공인 및 재공인 대상 운영 구조는 [그림 1-1] 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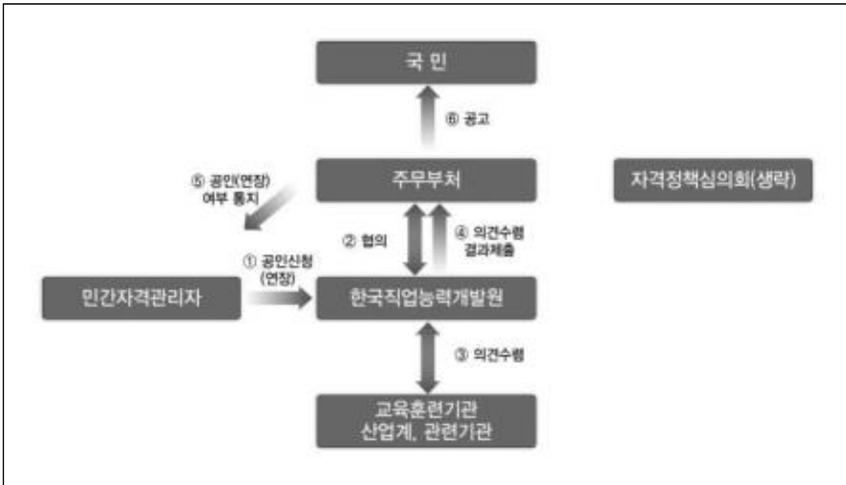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 ① 공인 신청: 공인 공고에 따른 신청 및 접수
- ② 협의: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주무부처와의 협의
- ③ 조사·연구: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 ④ 의견 수렴: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 기관 등), 산업계,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⑤ 조사 결과 제출: 주무부처에 조사 결과 제출
- ⑥, ⑦ 심의: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 요청 및 심의 결과 통보(주무부처)
- ⑧, ⑨ 공인: 주무부처의 공인 여부 통지 및 공고

○ 연장 승인 대상 운영 구조는 [그림 1-2]와 같음.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 운영 구조



- ① 공인 신청(연장 승인): 공인 공고에 따른 신청 및 접수
- ② 협의: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주무부처와의 협의
- ③ 의견 수렴: 공인 신청 자격의 연장 승인에 대한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 기관 등), 산업계,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④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주무부처에 조사 결과 제출
- ⑤, ⑥ 공인: 주무부처의 공인(연장 승인*) 여부 통지 및 공고(자격정책심의회 생략)

*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2항에 의거해 주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책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음.

10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주요 추진 절차

-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등 조사 체계 계획 수립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공고(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및 접수
- 공인 신청 접수 종목에 대한 신청 자격 및 법적 요건 검토(심사 전)
- 신규 공인 신청 종목 조사(서류 심사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장 조사 실시)
-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신청 종목 조사(현장 조사 실시)
-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 기관 등), 산업계,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심사 결과 정리 및 민간자격 국가공인 대상 종목 추천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 결과 주무부처 송부
- 변경 승인 신청 공인자격,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일부 면제 및 완화 점정 시행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및 승인
- 20년간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결과 분석
- 결과 분석을 통한 차기 연도 사업 추진 계획 절차 수립 및 보완

나. 공인자격을 공신력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제도 개선 사항 검토

○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질 향상을 위한 연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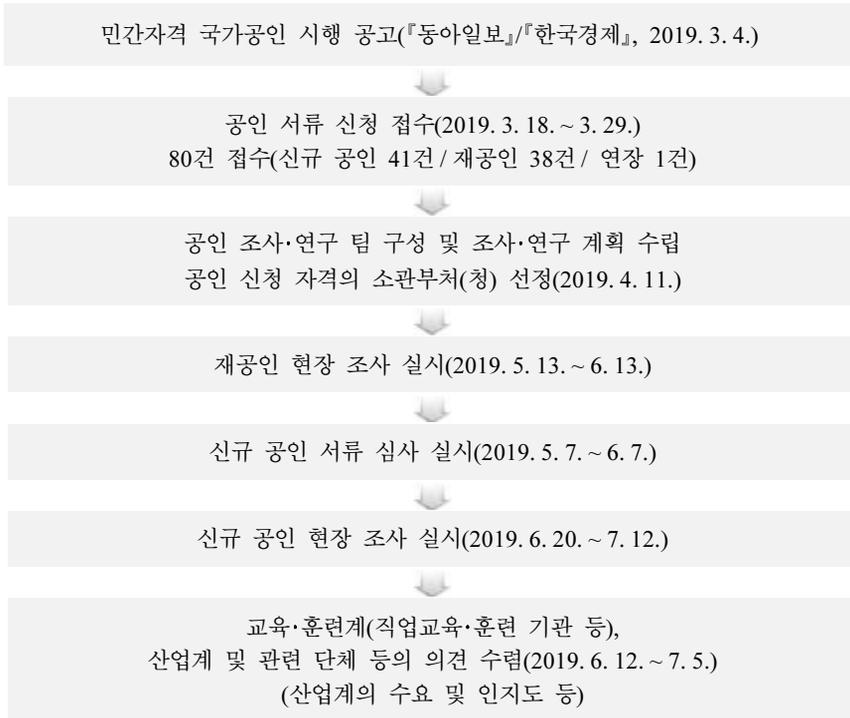
- 공인 민간자격 기관 실무자 및 책임자 대상
- 공인 민간자격 기관의 관리·운영 능력 제고를 통한 민간자격 시장 활성화 및 건전 운영 풍토 조성
-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공인 민간자격의 품질 향상
- 공인 민간자격 관련 최근 동향 및 강조 사항 전달

- 공인 민간자격 실무자 의견을 통한 민간자격 관리자 의견 수렴
- 공인 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제언 및 향후 개선 방안 협의
 - 공인 제도 관련 정책 제언
 - 공인 사업 추진 절차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향후 개선 방안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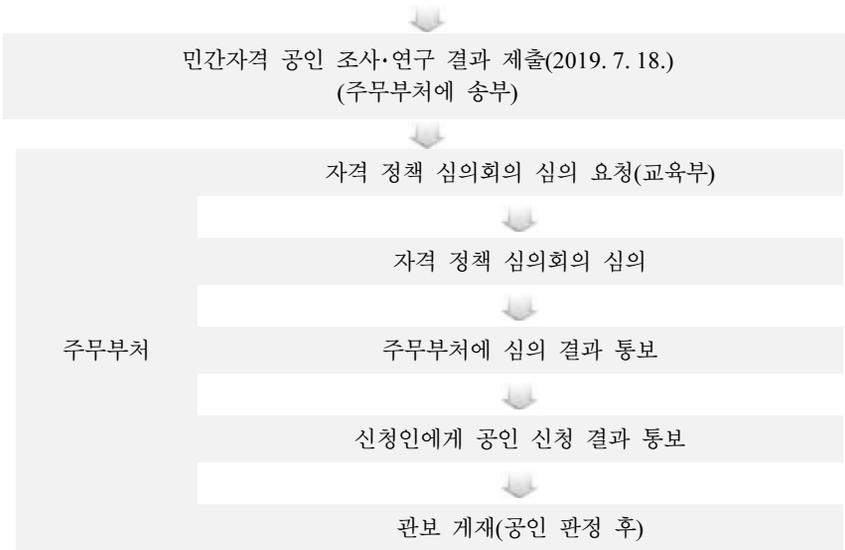
3. 금년도 조사·연구 추진 절차

가. 신규 공인 및 재공인 신청 대상(연장 승인 제외)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민간자격 공인 신청 접수에 관한 고시

- 민간자격 공인 시행 공고(『동아일보』/『한국경제』, 2019. 3. 4.)
 - 서류 신청 및 접수 진행
 - 서류 접수 기간: 2019. 3. 18. ~ 3. 29.
 - 신청 현황: 80건(신규 공인 41건, 재공인 38건, 연장 승인 1건)
 - 접수 현황: 80건(신규 공인 41건, 재공인 38건, 연장 승인 1건)
- ※ ‘한자급수인증시험’ 자격은 신청 기관 측의 신청 철회(2019. 6. 18.)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공인 조사·연구 팀 구성 및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연구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훈련 기관 및 산업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제반 여

건 마련

- 체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신규 공인 종목에 한함), 내용 전문가, 주무부처 담당자로 구성(신규 공인 6~7인 내외, 재공인 3~4인 내외)

○ 조사·연구 실시

- 신규 공인 종목 심사
 - 서류 심사: 41건 전체 접수 종목에 대한 서류 심사 실시
(2019. 5. 7. ~ 6. 7.)
 - 현장 조사: 서류 심사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한 건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2019. 6. 20. ~ 7. 12.)
- 재공인 종목 심사³⁾
 - 현장 조사: 37건 실시
(2019. 5. 13. ~ 6. 13.)

○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결과 제출

- 주무부처에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제출(2019. 7. 18.)

○ 자격 정책 심의회 심의(10월 중)

- 심의회 심의 후 주무부처에 결과 통보(10월 중)

○ 공인 신청 결과 통지(10~11월 중)

- 주무부처에서 공인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10~11월 중)

3) 2020년 5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9건 중 연장 승인 대상 1건, 재공인 신청 철회 1건은 제외함.

나. 최초 공인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승인 조사·연구⁴⁾

○ 조사 대상

- 2020년 5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9건 중 최초 공인 기간이 만료되는 연장 승인 대상*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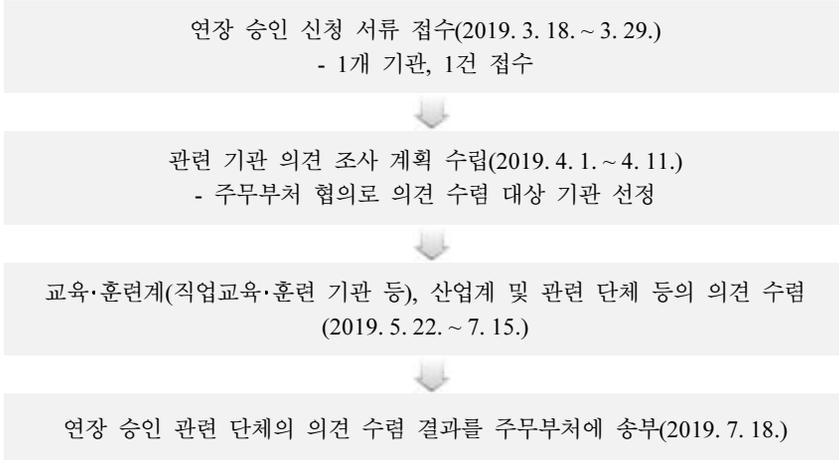
*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2항에 의거해 주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음.

○ 방법 및 절차([그림 1-4] 참조)

- 연장 승인 대상은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함.
- 연장 승인 대상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조사 항목
 - 해당 자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필요성
 - 향후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수요
 - 공인 기간 연장의 필요성
 - 민간자격 관리 기관의 대내외 인지도

4)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4항.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다. 변경 승인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완화 검정 승인 심의
([그림 1-5] 참조)

□ 변경 승인 심의

- 「자격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격의 등급, 검정 기준, 검정 방법, 검정 과목, 응시 자격 및 유효 기간, 교육·훈련 과정의 과목명, 이수 기간 및 평가 기준, 평가 방법

- 공인받은 민간자격 중 4개 종목(4개 기관)이 검정 과목 및 검정 방법 등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동 조사를 위해 주무부처 담당자와 해당 종목 전문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16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진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함.

○ 변경 승인 조사·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심의 위원회 체제로 구성하여 변경 승인 신청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고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변경 승인 신청 서류상 신청 내용 및 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 시 신청인을 배석하도록 하여 해당 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 최종심의 결과 변경 승인 신청 자격에 대해 ‘적합/ 부적합/ 조건부 적합/ 변경 승인 대상 아님’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주무부처에 변경 승인 결과를 제출함.

□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 이전 취득자에 대한 일부 면제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자격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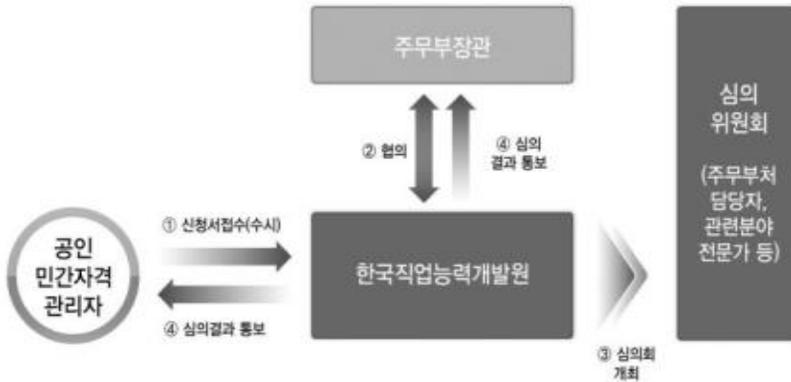
○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조사·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승인 심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되, 서류 심사 내용 중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 심사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함.
- 심사 결과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이 승인 적합 또는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인별 심사 결과표에 ‘승인 적합’ 또는 ‘승인 부적합’으로 표시함.
-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에 따른 별도의

부대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 심사 결과표에 ‘조건부 적합’으로 표시하고, 해당 조건 및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함.

- 공인받은 민간자격 중 1개 종목(1개 기관)이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동 조사를 위해 주무부처 담당자와 해당 종목 전문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진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함.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4. 민간자격 공인 제도의 운영 주체별 역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간자격 공인 제도의 홍보
 - 민간자격 공인 신청에 관한 고시
 - 민간자격 관리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 접수 및 법적 요건 심사
 - 종목별 해당 주무부처와의 협의

18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신청 종목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 기관 등), 산업계,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조사·연구 후 주무부처에 결과 송부
 - 민간자격 공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 체제 및 행정 지원 체제 구축
 - 민간자격 개발·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접수 및 안내
- 주무부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한 공인 제도 업무 수행
 - 주무부 장관의 민간자격 공인 여부 결정
 - 자격 신청인에게 공인 결과 통지 및 관보(홈페이지) 게재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 결과 통보
 - 주무부 장관의 공인 증서 교부
 -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해당 종목 관리·운영에 대한 확인·점검
 - 공인 취소 또는 자격 검정의 정지 등 사후 관리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제2장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⁵⁾

1. 신청 및 접수 대상

- 공인 신청 대상은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 검정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 (법인 등기부 등본⁶⁾을 통해 확인함)으로 함.
- 공인의 주 대상은 자격 종목 및 등급으로 함.
 - 공인 신청 시 공인 신청 종목과 등급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종목을 공인받았더라도 신규 등급 추가 시 해당 등급에 대해 재차 공인 신청을 하여야 함.
- 민간자격 관리자는 자격 발급의 주관 기관을 의미하며, 단순히 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은 공인 신청이 불가함.
- 자격 종목의 발급 기관이라 함은 자격증에 직인과 함께 명시된

5)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제1항,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6) 「민법」 제33조(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기관을 의미함.

- 공인 신청 기관은 단순히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 검정 체계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법적 요건 중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 검정 실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자격등록 후 신청일 현재 등록 이후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등록 후 신청일 현재 검정 실적(및 발급 실적)에 관한 산정 기준
 - 1년 이상 시행: 최초 자격 검정 시행 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공인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 3회 이상의 자격 검정 실적: 공인 신청 전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3회 이상 자격 검정을 실시하여야 함.
 - ② 최근 1년간 자격 종목의 중도 변경 시 공인 신청 가능 여부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등록 사항의 변경)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한 이후 신청일 현재 1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검정 실적이 없으면 공인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간주함.
 - 등록 사항 변경의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가능으로 통지된 이후 시행 가능함.

2. 2019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절차

- 민간자격 공인 신청 및 접수를 위해 『동아일보』 및 『한국경제』에 ‘민간자격 공인 시행 공고(2019. 3. 4.)’를 게재함.
- 이 외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인 시행 공고문 및 신청 편람을 탑재하고, 신청 및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함.
- 이 밖에 재공인 유효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공인 신청이 필요한 공인자격 관리자에게 공인 신청 안내를 별도로 진행함.
- 민간자격 공인 신청에 따른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첫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각호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에 의거해 공인 신청 민간자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함.
 - 이를 통해 민간자격 등록 여부 및 법인 여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3회 이상 실시 여부를 확인함.
- 둘째, 「자격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각호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공인 신청서 서류 제출 여부를 조사함.
 -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공인 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 실적 및 수지 결산서 등 사업 관련 실적, 공인 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검정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 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해당 민간자

격의 활용 정도와 같은 법적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함.

- 이 밖에 공인 신청 민간자격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인 기준에 적합한 종목인지 조사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체제(자격 설계 분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체제(검정 분야),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능력과 관련한 평가 자료를 제출받음.

3. 2019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

- 2019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2-1> 참조).
- 신청 및 접수 기간: 2019. 3. 18.(월)~3. 29.(금)
- 신청 종목 및 기관: 80건, 63개 기관
- 접수 종목 및 기관: 80건, 63개 기관

〈표 2-1〉 2019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단위: 건, 개)

구 분	신청 건수	접수 건수	접수 기관 수
신규 공인	41	41	35
재공인 ⁷⁾	38	38 ⁸⁾	27
연장 승인 ⁹⁾	1	1	1
계	80	80	63*

* 신규, 재공인, 연장 승인을 각각 신청한 기관이 중복 계산된 수치임.

※ 전체 접수된 80건 중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 대상은 신규·재공인 신청의 78건(재공인 철회 1건 제외)이며, 연장 승인 대상 1건은 추후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 없이 주무부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접수된 공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토대로 주무부처를 분류하며, 그 과정은 [그림 2-1]과 같음.

○ 주무부처 선정 기준

- ① 등록 소관부처로 주무부 장관 선정(유사 등록 자격이 있을 경우 포함)
- ② 기존 공인 심사 관련 통지 부처로 주무부 장관 선정
- ③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와 내용
- ④ 「정부조직법」상 업무 분장 사항
- ⑤ 이상과 같은 사항에 의해서 해당 자격의 관계 부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자격기본법」 개정(2013. 4. 5.)에 따라 2015년부터 등록 단계부터 주무부

7) 2020년 5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9건의 공인 종목 중 연장 승인 대상 1건을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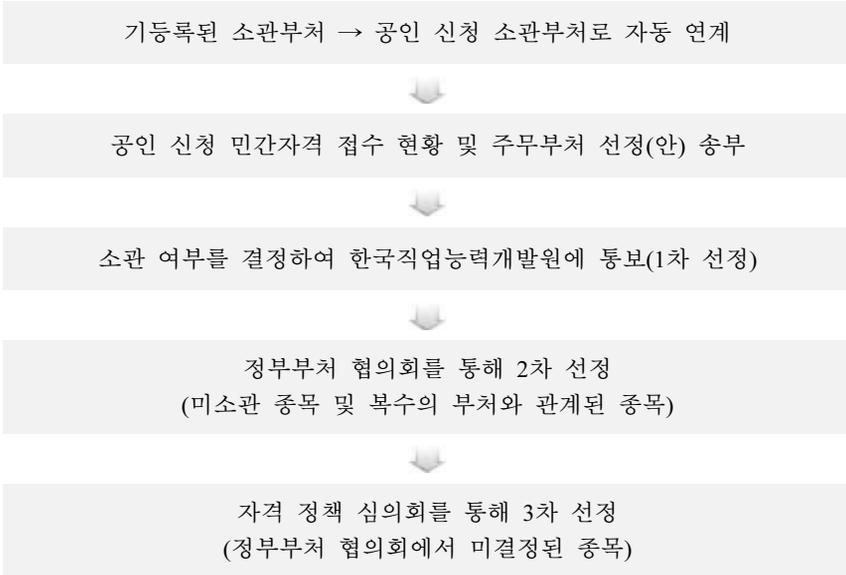
8) ‘한자급수인증시험’ 자격 종목은 당초 재공인 신청하였으나, 신청 기관 측의 신청 철회(2019. 6. 18.)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9) 「자격기본법」상 자격 정책 심의회에 심의·상정하는 재공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연장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26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처가 결정되고 있으며, 등록 소관부처를 공인 신청 소관부처로 자동 연계함.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 금년도의 경우 정부부처 협의회를 통해 모든 종목의 소관부처를 확정하였으며, 최종 신청 접수된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음.

〈표 2-2〉 2019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단위: 건)

부 처 명	신규 공인	재공인	연장 승인	합 계
금융위원회	2	4	-	6
기획재정부	-	1	-	1
교육부	5	20 ¹⁾	-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3	-	11
행정안전부	4	1	-	5
문화체육관광부	2	4	-	6
농림축산식품부	6	-	-	6
산업통상자원부	7	2	-	9
보건복지부	5	-	-	5
고용노동부	1	-	-	1
국토교통부	1	1	1	3
경찰청	-	1	-	1
산림청	-	1	-	1
총 13개 부·처·청·위원회	41	38	1	80

1) ‘한자급수인증시험’자격 종목은 당초 재공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기관 측의 신청 철회(2019. 6. 18.)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4. 2019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의 주요 특성 분석

가. 신규 공인 신청 종목

1) 재신청 현황

- 2019년도 신규 공인 신청에 따른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조사 결과 공인 부적합 대상이던 종목 중의 다수가 재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현 「자격기본법」에는 공인 탈락 시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신규 공인 신청 41건 중 과거 공인 탈락한 27건이 재신청을 함. 이는 전체의 약 66%를 차지함.

2) 기관 현황

- 신청 대상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인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에서 다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즉, 과거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운영 중인 기관이 반복적으로 새로운 자격 종목을 개발하여 공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에서 신청한 신규 종목은 9건으로 5개 기관에서 신청함(신규 41건 중 9건, 22%).

나. 재공인 및 연장 승인 신청 종목의 주요 특성

1) 재신청 현황

- 2019년도 재공인 신청(연장 승인 포함)에 따른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이래로 공인 유효 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종목 39개 중 39개 종목(100%)이 재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기공인 자격의 재신청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1. 조사·연구 위원 구성 및 조사·연구 방법

가. 조사·연구 위원 구성

- 신규 공인 조사·연구팀은 자격 종목별 체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 내용 전문가 및 주무부처 담당자 등 6~7인 내외로 구성함.
- 원내 전문가의 경우 전공, 관심 분야, 과거 심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담당 심사 종목을 선정함.
- 자격 종목별 내용 전문가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선정함.
- 단, 주무부처의 내용 전문가 추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적합한 인사를 선정함.
- 내부 전문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주무부처 담당자)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연구 위원으로 선정할 때에는 해당 신청 자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촉·선정하되,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음.

나. 조사·연구 방법

- 신규 공인 신청 종목에 대한 조사·연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함.¹⁰⁾
 - 단, 서류 심사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종목에 한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함.
- 공인 신청 민간자격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인 기준에 적합한 종목인지 조사함(「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제3호 근거).
 - 첫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자격 관리·운영 체제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둘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검정 관리·운영 체제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셋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신규 공인 조사·연구의 기준은 <표 2-3>과 같음.

10)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2항.

〈표 2-3〉 신규 공인 ‘서류 및 현장 조사’ 기준

분야	영역	항목	조사 방법		세부 평가 내용	관련 법령	
			서류 심사	현장 조사			
2. 공인 기준 충족 여부	2.1.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자격 분야)	2.1.1. 자격의 필요성	○	○	2.1.1.1. 운영 목적	「자격기본법」 제3조,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제3호	
					2.1.1.2. 자격의 활용도		
		2.1.2. 자격 체계의 적합성	○	○	2.1.2.1. 검정 기준		
					2.1.2.2. 검정 방법		
					2.1.2.3. 검정 과목		
					2.1.2.4. 응시 자격		
		2.2.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검정 분야)	2.2.1.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	○	○		2.2.1.1. 출제 기준
							2.2.1.2. 문제의 적절성
2.2.1.3. 출제 절차 및 보안							
2.2.1.4. 채점 기준 및 절차							
2.2.1.5. 채점 관리							
2.2.2. 검정 시험의 적합성	○		○	2.2.2.1. 검정 계획 및 실행 절차			
				2.2.2.2. 시험 감독			
				2.2.2.3. 시험 문제 보안			
				2.2.2.4. 검정료			
2.3.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능력 (기관 분야)	2.3.1.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		○	○	2.3.1.1. 관리·운영 조직		
					2.3.1.2. 인력		
					2.3.1.3. 시설·장비		
		2.3.1.4. 재정					
		2.3.1.5. 발전 계획					
		2.3.1.6. 자격 발급 및 등록					
		2.3.1.7. 사후 관리 및 문서 보관					

다. 공인 적합 대상 종목 선정 기준

- 2000년부터 신청 민간자격별 주무부처와 공인 추천 기준을 협의 하여 공인 적합 대상을 선정하여 왔음. 특히 공인 조사·연구 결과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총점(220점)의 70%(154점) 이상, 하 위 영역별 배점의 40%(88점) 이상을 얻은 민간자격 종목 중 주 무부처에서 공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종목에 한하여 공인 적합 대상 종목으로 심의·상정함.
- 2019년에도 주무부처 담당자 협의회(2019. 4. 11.)를 통해 본원의 공인 추천 기준인 총점의 70%(154점) 이상을 얻은 대상을 공인 적합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로 함(<표 2-4> 참조). 이에 2019년 도 조사·연구 결과 중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40%) 이하가 없으며, 환산 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종목을 공인 적합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고 결과를 주무부처에 송부함.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평가 등급	점수(220점 만점)	선정 기준
우수(80% 이상)	176점 이상	국가공인 추천
보통(70% 이상 80% 미만)	154점 이상 176점 미만	
미흡(60% 이상 70% 미만)	132점 이상 154점 미만	국가공인 추천하지 않음
매우 미흡(60% 미만)	132점 미만	

- 단, 위의 조사·연구 기준에서 환산 점수 총점이 154점(70%) 이상

이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 출제 과정상에 문제 유출 사례가 있거나 허위로 출제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 채점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검정 시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 시험 문제의 인쇄, 운송, 보관 과정에서 문제의 유출이 있는 경우
- 부정하게 자격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 기타 검정 시행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명시된 서류 보관 및 폐기 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규 공인 서류 심사 실시 결과

- 대상 종목: 41건, 35개 기관
- 심사 기간: 2019. 5. 7.(화) ~ 6. 7.(금)
- 심사 위원 위촉 현황
 - 원내: 12명(각 팀 책임 9명, 지원 3인 포함)
 - 원외: 103명(체제 전문가 13명, 재정 전문가 1명, 내용 전문가 65명, 주무부처 담당자 24명)

- 서류 심사 조사 기준
 - 2019년도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기준
- 2019년도 신규 공인 신청 대상 종목에 대한 서류 심사 결과
 - 현장 조사 대상 5개 종목(5개 기관) 선정

3. 신규 공인 현장 조사 실시 결과

- 조사 대상: 5개 종목, 5개 기관
- 조사 기간: 2019. 6. 20.(목) ~ 7. 12.(금)
- 현장 조사 위원 위촉 현황
 - 원내: 7명(각 팀 책임 5명, 지원 2명)
 - 원외: 25명(체제 전문가 10명, 내용 전문가 10명, 주무부처 담당자 5명)
- 현장 조사 기준
 - 2019년도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기준
-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종목, 농림축산식품부 1종목, 산업통상자원부 1종목, 보건복지부 1종목, 고용노동부 1종목 등 총 5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실시(<표 2-5> 참조).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단위: 건)

소관부처	신규 공인 신청	현장 조사 대상
금융위원회	2	-
교육부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1
행정안전부	4	-
문화체육관광부	2	-
농림축산식품부	6	1
산업통상자원부	7	1
보건복지부	5	1
고용노동부	1	1
국토교통부	1	-
10개 부·처·청·위원회	41	5

- 2019년도 신규 공인 대상 41건 중 서류 심사 결과에 의해 현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 2건, 미흡 3건으로 나타남.

4.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실시 결과

- 근 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4항
- 의견 수렴 단체의 선정 기준
 - 신청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훈련 기관 및 관련 단체 중 1개 기관 이상을 선정하여 의견 수렴을 요청함.

36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의견 수렴 내용

- 산업계 측면에서 자격의 필요성 및 수요, 신청 기관의 인지도, 국가공인의 필요성 등

○ 의견 수렴 결과

- 신규 공인 신청 현장 조사 대상 5개 종목에 대해 11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회신함.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1. 조사·연구 위원 구성 및 조사·연구 방법

가. 조사·연구 위원 구성

- 재공인 조사·연구팀은 자격 종목별 체제 전문가, 내용 전문가 및 주무부처 담당자 등 3~4인 내외로 구성함.
- 자격 종목별 내용 전문가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선정함.
- 단, 주무부처의 내용 전문가 추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적합한 인사를 선정함.
- 내부 전문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주무부처 담당자)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연구 위원으로 선정할 때에는 해당 신청 자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촉·선정하되,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음.

나. 조사·연구 방법

- 재공인 신청 종목에 대한 조사·연구는 기공인된 종목의 조사·연구로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서류 심사를 제외한 현장 조사 후 평가를 반영함.¹¹⁾

11)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2항.

38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재공인 조사·연구 역시 신규 공인 조사·연구와 동일하게 공인 신청 민간자격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인 기준에 적합한 종목인지 조사함(『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제3호 근거).
 - 첫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자격 관리·운영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둘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검정 관리·운영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셋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재공인 조사·연구의 기준은 <표 2-6>과 같음.
 - 재공인 현장 조사는 공인 연도(2000~2019년)의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대해 공인 이후의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아울러 공인 당시의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함.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영역	항목	세부 평가 항목	관련 법령
2.1.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자격 분야)	2.1.1. 자격의 필요성	2.1.1.1. 자격의 활용도	『자격기 본법』 제3조,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제3호, 제26조
	2.1.2. 자격 체계의 적합성	2.1.2.1. 공인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에 대한 평가	
2.2.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검정 분야)	2.2.1.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	2.2.1.1. 출제 위원(검토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2.2.1.2. 출제 시 보안	
		2.2.1.3. 출제 절차 및 문제의 적절성	
		2.2.1.4. 출제 관련 문서 및 서류	
		2.2.1.5. 시험 문제 인쇄 방법 및 절차	
		2.2.1.6. 시험 문제 운송 방법의 적절성	
		2.2.1.7. 채점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2.2.1.8. 채점 절차	
		2.2.1.9. 채점 결과 및 답안지 보관	
	2.2.2. 검정 시행의 적합성	2.2.2.1. 응시자 자격(일반, 면제 등)	
2.2.2.2. 수험 원서와 연명부 관리 현황 및 일치 여부			
2.2.2.3. 검정 시행			
2.2.2.4. 검정 결과 보고			
2.2.2.5. 시험 감독 위원의 공정성 및 적절성			
2.2.2.6. 시험 감독 위원의 배치			
2.2.2.7. 시험 관리·감독 규정			
2.2.2.8. 시험장의 적절성			
2.2.2.9. 시험 문제 보안			
2.2.2.10. 검정료			

<표계속>

영역	항목	세부 평가 항목	관련 법령
2.3.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능력 (기관 분야)	2.3.1.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	2.3.1.1. 인력 및 조직	
		2.3.1.2. 시설 및 장비	
		2.3.1.3. 재정	
		2.3.1.4. 사후 관리 (자격 발급 및 등록, 자격의 유효 기간 등)	
		2.3.1.5. 민원 처리 업무	
		2.3.1.6. 합격 기준	
		2.3.1.7. 기타 사항	

다.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 선정 기준

-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 선정 기준은 신규 공인 조사·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함[154점(70%) 이상](<표 2-7> 참조).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평가 기준	점수(220점 만점)	선정 기준
최근 공인 및 재공인 당시 수준 유지 여부(27개 항목)	154점 이상	유효 기간 연장 추천
	154점 미만	유효 기간 연장 추천하지 않음

- 다만, 재공인 조사·연구의 경우 변경 승인 대상 항목에 부적합이 있거나, ‘조사·연구 결과’에서 세부 평가 항목별 F로 판정된 영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유효 기간 연장 추천을 하지 않으며,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함.

- 신규 공인 조사·연구와 마찬가지로 위의 조사·연구 기준에서 환산 점수 총점이 154점(70%) 이상이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 출제 과정상에 문제 유출 사례가 있거나 허위로 출제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 채점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검정 시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 시험 문제의 인쇄, 운송, 보관 과정에서 문제의 유출이 있는 경우
 - 부정하게 자격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 기타 검정 시행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명시된 서류 보관 및 폐기 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재공인 조사 대상

- 2020년 5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9건 중 연장 승인 대상 1건, 재공인 신청 철회 1건을 제외한 37건이 조사 대상임.
 - 이에 2019년도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현장 조사는 37건에 대해 실시함.

3. 재공인 현장 조사 실시 결과

- 대상 종목: 37건, 26개 기관
- 조사 기간: 2019. 5. 13.(월) ~ 6. 13.(목)
- 심사 위원 위촉 현황
 - 원내: 12명(지원 3인 포함)
 - 원외: 57명(체제 전문가 12명, 내용 전문가 28명, 주무부처 담당자 17명)
- 2019년 공인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공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 종목은 총 37건임.
- 2019년도 재공인 대상 현장 조사를 실시한 종목 37건 가운데 34건에 대해 공인 유효 기간 연장 추천의 결과가 나타남.
- 한자급수인증시험 1건은 신청 기관 측의 신청 철회(2019. 6. 18.)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4.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실시 결과

-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종목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4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함.
- 의견 수렴 단체의 선정 기준
 - 신청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중 2개 기관 이상을 선정함.

-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자격 필요성 파악
 -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자격 수요 파악
 - 민간자격 관리 기관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인지도 파악
 - 공인 민간자격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의견 수렴 결과
 - 제공인 종목에 대해 75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5개 기관이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의견 수렴 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송부함.

5. 연장 승인 종목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2항에 의거해 주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음.
 -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음.
- 대상 종목: 1건, 1개 기관
- 조사 기간: 2019. 5. 22.(수)~ 7. 15.(월)

4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연장 승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 연장 승인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2개 기관 이상)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함.
 - 주무부 장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참고하여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의견 수렴 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차 선정한 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함.
 - 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의 주요 내용
 -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자격 필요성 파악
 -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자격 수요 파악
 - 민간자격 관리 기관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인지도 파악
 - 공인 민간자격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 2019년 연장 승인 대상 1건에 대해 교육·훈련 및 산업계 5개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개 기관(단체)에서 대상 종목에 대한 의견을 회신함.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1. 변경 승인 심의

가. 변경 승인 심의 절차

- 「자격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인받은 자격의 등급, 검정 기준,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응시 자격 및 유효 기간을 변경하여 자격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공인받은 민간자격 중 6개 종목(6개 기관)이 검정 기준,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유효 기간 등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동 조사를 위해 해당 자격의 주무부처 담당자와 자격 종목별 체제 전문가 및 내용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함.

나. 변경 승인 심의 결과

- 변경 승인 적합 여부 심의 결과 4개 종목의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2개 종목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주무부처 및 신청 기관에 해당 결과를 통지함.

2. 공인 이전 취득자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가.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심의 절차

-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인 자격 관리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인 이전 취득자에 대해 일부 면제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자격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공인 민간자격 중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은 자격 정책 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연중 수시로 접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1개 기관(1개 종목)이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으로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을 신청함.

나.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심의 결과

-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심의 결과 1개 종목은 심의 ‘적합’으로 판정하여 소관 주무부처 및 신청 기관에 해당 결과를 통보함.

제3장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및 상담

제1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제2절 민원 접수 및 상담

제3장 |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및 상담

제1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1. 개최 배경 및 목적

가. 개최 배경

-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심의 위원회(2005년)에서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이 공인 이후에도 관리·운영 능력 및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됨.
- 이에 2005년 11월에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회’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민간자격 제도의 보편적인 문제점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소개하여 민간자격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관리·운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3년도에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
- 2014년에는 「자격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전 등록제가 실시되는

등 제도상에 많은 변화가 있어 민간자격 관리자들과 함께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회를 개최함.

- 2015년에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변화된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및 제출 평가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취득자 사후 관리 차원에서의 공인 민간자격 유효 기간 설정에 관한 내용을 토의하고, 각 공인자격 관리자 실무자들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교류의 시간을 가졌음.

나. 연도별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의 주요 내용

- 2006년도 연수회에서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이 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스스로를 진단하여 양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 관리·운영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관리·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선의의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7년도 연수회에서는 8개년간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과년도 연수를 통한 수차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재공인 조사·연구 시 매번 반복해서 도출되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지적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음.
- 2008년도 연수회에서는 「자격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으로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가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제도의 향후 시행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2009년도 연수회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자격 체계의 개발을 주제로 연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자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자격 관리자가 향후 민간자격을 신설 및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도 연수회에서는 민간자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 및 거짓·과장 광고 사례, 그리고 신설 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지시켜 민간자격 등록 시 금지 분야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음.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 기관의 사례(사후 관리 및 취업 지원, 시스템 도입 및 활용, 해외 진출 등)를 소개하여 향후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2011년도 연수회에서는 민간자격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이용 방법 안내, 그리고 민간자격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교육하였음. 또한 최근 신설된 국가공인자격협회의 주요 기능 및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의 자격 관리·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 2012년도 연수회에서는 민간자격 등록 절차 및 금지 분야, 민간자격 공인 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절차에 대한 안내, 소비자 피해 사례 및 부당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그뿐만 아니라 민간자격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제작한 민간자격 제도 홍보 영상 시연이 있었음. 또한 건전한 민간자격 시장을 향한 자율 기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간자격 관리자 윤리 강령 선언식’이 있었음.

5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2013년도 연수회에서는 「자격기본법」의 개정 내용 안내와 함께 공인 민간자격 관리 우수 사례(관리 우수 사례, 활용 우수 사례), 공인 민간자격의 민원 처리 방안, 국가기술자격의 문제 출제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음.
- 2014년도 연수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과정평가형 민간자격 운영 방향, 민간자격 관리·운영 주의 사항(민간자격 지도·점검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시험 관리의 기본 원칙, 2014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 사례,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 2015년도 연수회는 자격 광고의 표시 의무, 개인 정보 수집 및 관리 방안,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 2016년도 연수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법령에 대한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민간자격 제도 운영 시 필요한 내용을 공인자격 관리자들에게 제시하였음.
- 특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에 「자격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 관리자가 실시하는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이 포함되고, 해당 조항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들이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공인자격 관리자 공인자격 만료 및 폐지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공인자격 관리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였음.

- 또한 검정 시행 관리 및 시험 지부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국가 기술자격 등 참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에게 검정 시행과 관련된 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을 개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의 자리를 마련하였음.
- 2017년도 연수회에서는 국가 전문 자격 합격률 안정화 방안과 전문 자격 출제 관리 시스템 및 활용 사례 소개를 통해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관리·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음.
- 또한 재공인 조사 중 공인 사항의 임의 변경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완화 검정 시행 승인 신청 및 심의 절차, 공인 사항의 변경 승인 신청 및 심의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자격 표시 광고 시 유의 사항, 관련 법령 등의 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 시 유의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 뿐만 아니라 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현황 및 기관의 활용성 제고 추진 사례를 발표하여 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 관련 최근 동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 간의 정보 교환 자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민간자격 시장의 활성화를 간접 지원하였음.
- 2018년도 연수회에서는 민간자격 제도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정부의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와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를 통합 실시하였음.

5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민간자격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민간자격 제도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자격 등록 요건 강화 등 민간자격 제도 개선 방향, 민간자격 표준약관(안) 도입에 따른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인 민간자격 검정 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운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민간자격 제도 운영 시 필요한 내용을 공인자격 관리자들에게 제시하였음.

다. 금년도 연수 주요 내용

- 2019년도 연수회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의 제고를 통한 공인 민간자격 품질 향상,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의 의견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민간자격 시장 활성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공동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함.
- 주요 연수 내용으로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 2019년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이었으며,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민간자격 제도 운영 시 참고할 만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2. 세부 추진 사항 및 주요 내용

- 목 적: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의 제고를 통한 공인 민간자격 품질 향상 등
- 장 소: SKY31컨벤션 오디토리움홀(서울시 송파구 소재)
- 일 정: 2019. 11. 14.(목), 14:00~17:00
- 참석자: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 업무 담당자, 교육부 관계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 총 70명 내외
 - ※ 공인자격 관리 기관 61개 중 35개 기관 참석
- 주요 내용
 - 민간자격 관리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 2019년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

56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세부 일정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소요 시간
등록 및 인사말	13:30~14:00	<input type="checkbox"/> 등록	30분
	14:00~14:20	<input type="checkbox"/> 인사말	20분
Part I 발 표	14:20~15:00	<input type="checkbox"/> Part I.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이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원 연구위원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 (Q&A)	40분
Part II 발 표	15:00~15:40	<input type="checkbox"/> Part II.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렬 선임연구위원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 (Q&A)	40분
휴 식	15:40~16:00	휴 식	20분
Part III 발 표	16:00~16:40	<input type="checkbox"/> Part III. 2019년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애리 전문연구위원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 (Q&A) / 연수 만족도 조사	40분
폐 회	16:40~	-	20분

제2절 민원 접수 및 상담

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국민 신문고 민원 사례

- 공인 민간자격의 유효 기간에 대한 질의(접수일: 2019. 8. 3.)
 - 내용: 공인 민간자격 간 유효 기간 및 갱신 방법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
 - 조치 내용: 민간자격의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비슷한 공인 민간자격이라 할지라도 각 공인 민간자격마다 검정 기준,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응시 자격 및 유효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함. 아울러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변경 승인 심의회를 통해 자격의 공인 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함.

□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사례

- 민간자격 관리 기관의 소관부처 변경 요청(접수일: 2019. 4. 25.)
 - 내용: 국가공인 심사 과정 중 신규 공인 신청 종목의 소관부처 변경을 요청함.
 - 조치 내용: 변경 요청한 해당 부처에서는 당초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해당 협회 공인 신청 민간자격을 금지 분야로 판단한 바 있으며, 해당 협회의 요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님을 회신하였음에 관해 안내함.

- 동물미용 민간자격 국가공인 심의 관련 정보 공개 요청(접수일: 2019. 8. 12.)
 - 내용: 동물미용 민간자격 국가공인과 관련된 최근 3년간 평가 기준 및 결과, 공인화 과정에 따른 회의록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결재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함.
 - 조치 내용: 평가 기준의 경우 모든 신청 자격에 동일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탑재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민간자격 신규 공인 신청 편람의 위치를 안내함. 평가 기준을 제외한 공개 요청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바 비공개 요청을 받았으며,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근거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함.
- 정보 공개 결정 등 이의 신청서(접수일: 2019. 9. 17.)
 - 내용: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은 8월 12일에 신청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함. 아울러 첨부한 자료가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조치 내용: 첨부된 자료의 광고의 주제, 광고 일시 및 광고 매체 등이 불분명하여 거짓·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님을 안내함.

□ 공문을 통한 민원 사례

- 신규 공인 신청에 따른 질의 및 건의
 - 내용: 공인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진상 규명 후 불공정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함.
 - 조치 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공인 신청 편람(2019)에 의거해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라도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토록 하겠음을 안내함.

□ 인터넷 민원 사례

- 심사 위원 신상 정보 문의: 해당 부처 추천인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기관에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함.
- 심사 결과 정보 공개 관련 문의: 자격 정책 심의회 이후 주무부처에서 공인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것이 확인되면, 정보 공개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일정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심사 결과를 공개함을 안내함.
- 개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의 공인 신청 문의: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해 법인에서 운영하는 자격에 한하여 공인 신청 가능함을 안내함.
- 부분 공인에 관한 문의: 공인자격 확인 후 자격 내 자격 급수

중 공인되어 있는 자격 급수를 안내함.

- 검정 기준 등 변경 등록 이후 공인 접수 문의: 변경 이후 1회 이상 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검정 실적이 없을 시 공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안내함.
-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 검정 실적’에 관한 문의: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에 의거해 법인 운영 기관이어야 하며, 법인 등록 후 최초 자격 검정 시행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3회 이상의 검정 실적을 갖추어 함을 안내함.
- 민간자격 운영 후 공인자격 자동 승격 문의: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 기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함.
- 공인받기 이전 취득자의 공인자격 취득에 관한 문의: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 인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함.
- 공인 민간자격 운영과 관련된 제보성 민원: 해당 공인 민간자격의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소관부처 담당자에게 이송하였음을 안내함.

2. 상담 및 지도 현황

가. 전화 문의에 따른 상담 지도

- 공인 신청 관련
 - 공인 신청 요건 문의: 공인 신청 편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안내함.
 - 공인 신청 시 제출 자료 관련 문의: 공인 신청 편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안내함.
 - 재공인 및 변경 공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문의: 공인 신청 편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안내함.
 - 심사 일정 및 공인 절차 관련 문의: 공인 신청 편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안내함.
 - 신청 자격의 심사 결과 문의: 공인 결과의 통보는 주무부처의 권한이므로 조사·연구 진행에 따라 소관부처의 통보 시기를 예측하여 고지함.
- 공인자격 운영 주체 관련 질의
 - 유사 민간자격 운영 3개 기관(A, B, C) MOU 체결 후 C기관에서 운영하던 자격을 공인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인자격의 주체 여부에 대한 질의
 - 공인 신청 대상인 민간자격 관리자는 자격 발급 주관 기관을 의미하며, 자격 종목의 발급 기관이라 함은 자격증에 직인과 함께 명시된 기관을 의미함을 안내함. 이에 C기관에서 C기관 명의로 운영하던 자격증의 경우 C기관이 공인자격의 주체임을 안내함.

6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민간자격 취득자의 민원 사례
 - 유망 민간자격 관련 문의 및 자격 취득 희망자의 민간자격 정보 요구: 관련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등 민간자격 정보가 등재된 인터넷 자격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도록 안내함.
- 공인 민간자격 등록 정보 변경 문의: 공인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민간자격 정보서비스(PQI)를 통해 등록 정보를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함.

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방에 따른 상담 지도

- 공인 신청 관련 상담
 - 과년도 조사·연구 결과 열람 요청: 정보 공개 기간 내에 열람하지 못한 기관 등이 있으므로 신청 당일 이전까지 조사·연구 시 지적받은 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신청 시 활용하도록 함.
 - 공인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 자격 심사 과정 중 중간 결과 요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업무 수행 특성상 중간 결과의 공개는 불가함. 따라서 「자격기본법」상의 제도 추진에 따른 주무부처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함.
- 자격 관리·운영 및 신설 관련
 - 운영 규정 개선 관련: 본 연구 사업 참여 연구진과의 면담을 통해 개선 지도함.

- 민간자격 신설 관련 문의: 공인을 목표로 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격 관리자에게는 직무 분석 등 공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격 체제의 구성 및 검정 기구 설립 등에 대해 지도함.

제4장

20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

제1절 20년간(2000~2019년) 공인 신청 현황

제2절 20년간(2000~2019년) 공인 조사 결과

제3절 2019년도 기준 공인 민간자격 관리
현황 총괄

제4절 2019년도 조사·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
분석

제4장 | 20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

제1절 20년간(2000~2019년) 공인 신청 현황

- 2000년 제1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9년 현재 제20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 제1차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을 시행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인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0년도에는 217개 종목이 신청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114개 종목, 2002년도에는 108개 종목, 2003년도에는 112개 종목, 2004년도에는 73개 종목, 2005년도에는 119개 종목, 2006년도에는 102개 종목, 2007년도에는 84개 종목, 2008년도에는 84개 종목, 2009년도에는 68개 종목, 2010년도에는 86개 종목, 2011년도에는 96개 종목, 2012년도에는 77개 종목, 2013년도에는 96개 종목, 2014년도에는 100개 종목, 2015년도에는 80개 종목, 2016년도에는 70개 종목, 2017년도에는 71개 종목, 2018년도에는 75개 종목, 2019년도에는 80개 종목이 공인 신청됨.

- 이 중 공인을 받은 자격 종목 중 공인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공인 및 연장 승인을 신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6개 종목, 2003년도 6개 종목, 2004년도 7개 종목, 2005년도 23개 종목, 2006년도 15개 종목, 2007년도 17개 종목, 2008년도 12개 종목, 2009년도 12개 종목, 2010년도 29개 종목, 2011년도 31개 종목, 2012년도 15개 종목, 2013년도 35개 종목, 2014년도 32개 종목, 2015년도 29개 종목, 2016년도에 36개 종목, 2017년도에 29개 종목, 2018년도에 42개 종목, 2019년도에 39개 종목이 신청됨(<표 4-1> 참조).

〈표 4-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단위: 건, %)

연도	신청 자격 수		공인자격 수	공인율
	신규 신청	재공인 (연장 승인 포함)		
2000	217	-	28	12.9
2001	114	-	7	6.1
2002	102	6	5	4.9
2003	106	6	6	5.7
2004	66	7	6	9.1
2005	96	23	12	12.5
2006	87	15	6	6.9
2007	67	17	3	4.5
2008	72	12	7	9.7
2009	56	12	11	19.6
2010	57	29	10	17.5
2011	65	31	4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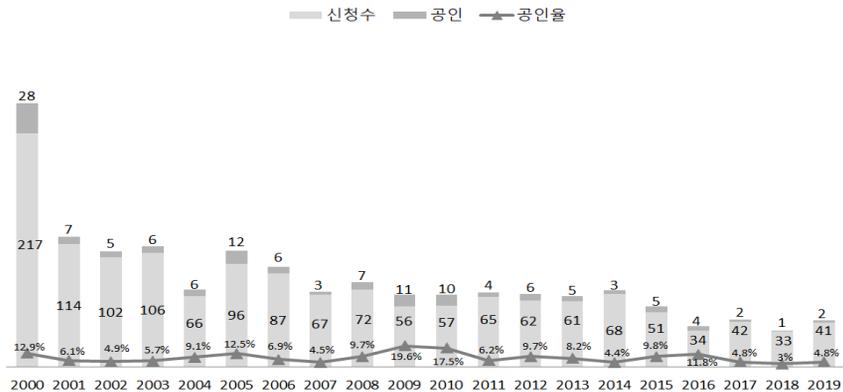
<표 계속>

연도	신청 자격 수		공인자격 수	공인율
	신규 신청	재공인 (연장 승인 포함)		
2012	62	15	6	9.7
2013	61	35	5	8.2
2014	68	32	3	4.4
2015	51	29	5	9.8
2016	34	36 ¹²⁾	4	11.8
2017	42	29 ¹³⁾	2	4.8
2018	33	42	1	3
2019	41	39	2	4.8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1]과 같이 공인 신청률의 감소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12) 신청하였으나 접수가 반려된 2개 종목을 제외한 수치임.

13) 신청하였으나 접수가 반려된 1개 종목을 제외한 수치임.

- 이는 2019년 10월 기준 PQI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공인 민간자격과 등록 민간자격을 합하여 총 36,604개(10월 2일 기준)인 상황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공인 제도 참여가 저조한 것은 공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자격 시장에서는 등록 여부만으로도 자격 수요가 충분히 있으며, 적절히 운영될 경우 수요자에게 자격의 공신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김덕기 외, 2015).
- 공인 제도에 대한 민간자격 관리 기관의 참여 저조는 공인 제도를 통한 민간자격의 질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러한 ‘정보 비대칭’ 때문에 민간자격 관리 기관들이 엄격한 평가 절차에 따라 공인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등록만 하고, 이를 자격 수요자에게 ‘홍보’하는 것만으로 자격의 상품성이 보장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임(김덕기외, 2015).

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현황

- 20년간(2000~2019년) 주무부처별로 국가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1,912개 종목의 공인 신청 중 1,497개 종목이 신규 공인 신청되었으며, 415개 종목이 재공인(연장 승인) 신청됨.
- 신규 공인 신청 건수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330개

종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부가 301개 종목, 산업통상자원부가 275개 종목, 문화체육관광부가 149개 종목, 고용노동부가 93개 종목, 국토교통부가 66개 종목, 농림축산식품부가 52개 종목, 기획재정부가 46개 종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개 종목, 금융위원회가 30개 종목, 행정안전부가 20개 종목, 경찰청이 17개 종목, 법무부가 15개 종목, 산림청이 10개 종목, 방송통신위원회가 10개 종목, 소방방재청이 8개 종목, 해양경찰청이 7개 종목, 여성가족부가 5개 종목, 중소벤처기업부가 4개 종목, 조달청이 3개 종목, 특허청이 3개 종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개 종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개 종목, 환경부가 2개 종목, 농촌진흥청이 2개 종목, 공정거래위원회가 1개 종목, 관세청이 1개 종목, 외교부가 1개 종목을 순으로 나타남. 또한 기타 주무부처 미소관 10개 종목이 신청됨(<표 4-2> 참조).

- 초기에는 주무부처가 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일부 부처에 공인 신청이 집중되었으나 횟수를 거듭할수록 해당하는 주무부처가 확대되는 추세임. 현재 15개 부, 1개 처, 8개 청, 4개 위원회의 소관으로 공인 신청이 접수되고 있음.
-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8개 부처에 공인을 신청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교육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연간 약 20개 정도의 공인 신청을 받고 있었으나 2014년 이후 공인 신청 건수가 한 자릿수로 점차 줄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도 최초 2000년도

보다 공인 신청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

-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2000년에 전체 공인 신청 건수 중 3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신청 비중이 감소하여 2019년에는 전체 공인 신청 건수의 12%로 급락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00년에 전체 공인 신청 건수의 14%였으나 2019년에는 2%로 나타남.

<표 4-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단위: 종목)

주무부처	사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방송통신위원회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1	1	0	0	0	10
금융위원회		0	0	0	2	1	3	0	0	1	0	0	1	0	2	5	6	3	2	2	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2
공정거래위원회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기획재정부		11	6	6	3	3	2	4	1	1	0	2	0	2	4	1	0	0	0	0	0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7	5	5	1	3	2	8	31
교육부		31	25	21	20	10	27	21	14	20	12	10	22	23	13	9	4	5	4	5	5	301
법무부		4	2	1	3	2	0	1	0	0	0	0	0	1	1	0	0	0	0	0	0	15
행정안전부		1	2	3	1	0	0	0	0	0	0	0	0	2	1	3	1	1	0	1	4	20
문화체육관광부		25	4	4	4	8	10	10	9	10	12	10	11	5	7	7	5	3	2	1	2	149
농림축산식품부		1	0	0	1	0	1	1	1	0	2	1	2	3	5	5	6	6	5	6	6	52
산업통상자원부		28	21	21	20	15	15	15	16	14	11	14	16	11	9	11	7	6	12	6	7	275
보건복지부		73	32	25	25	11	31	28	18	9	9	8	6	6	8	13	11	4	5	3	5	330
환경부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2
고용노동부		31	16	12	11	5	0	1	1	1	1	4	4	2	0	1	0	0	1	1	1	93
여성가족부		0	0	0	0	0	0	0	0	0	0	1	0	0	0	2	1	1	0	0	0	5
국토교통부		5	4	4	12	6	1	1	3	4	2	2	2	3	3	3	3	2	2	3	1	66
중소벤처기업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4
외교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표 계속>

주무부처	사업 연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관세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조달청	1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3
경찰청	4	1	1	1	2	2	2	0	0	1	1	1	1	0	0	0	0	0	0	0	17
소방방재청	0	0	0	0	0	2	1	1	3	0	1	0	0	0	0	0	0	0	0	0	8
산림청	1	1	1	0	1	0	0	0	0	1	1	0	1	0	2	1	0	0	0	0	10
농촌진흥청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특허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3
해양경찰청	0	0	2	2	2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7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0	3
미소관	0	0	0	0	0	2	0	0	1	4	2	0	0	0	1	0	0	0	0	0	10
신규 공인 소계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7	65	62	61	68	51	34	42	33	41	1,497
재공인 (연장 등인)	0	0	6	6	7	23	15	17	12	12	29	31	15	35	32	29	36	29	42	39	415
합 계	217	114	108	112	73	119	102	84	84	68	86	96	77	96	100	80	70	71	75	80	1,912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제2절 20년간(2000~2019년) 공인 조사 결과¹⁴⁾

1. 연도별 공인 조사 결과 현황

- 총배점은 각 사업 연도별 210점(2000년), 250점(2001년), 220점(2002년~현재)으로 변함. 과년도 조사·연구 결과 기준 적용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 사업 연도에서 총배점의 70% 이상의 평가 점수를 얻은 ‘보통(양호)’ 이상을 공인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여 음.
- 지난 20년간(2000~2019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에 34개 종목, 2001년도에 9개 종목, 2002년도에 7개 종목, 2003년도에 13개 종목, 2004년도에 8개 종목, 2005년도에 14개 종목, 2006년도에 11개 종목, 2007년도에 4개 종목, 2008년도에 13개 종목, 2009년도에 13개 종목, 2010년도에 9개 종목, 2011년도에 12개 종목, 2012년도에 7개 종목, 2013년도에 6개 종목, 2014년도에 4개 종목, 2015년도에 4개 종목, 2016년도에 3개 종목, 2017년도에 2개 종목, 2018년도에 1개 종목, 2019년도에 2개 종목이 총점의 70% 이상을 얻었음(<표 4-3> 참조).

14) 이하에서는 2016년 공인 조사·연구에 따른 신규 공인 종목이 추가(4개 종목)된 이후인 2016년 10월 기준으로 공인 현황을 분석함.

〈표 4-3〉 평가 점수별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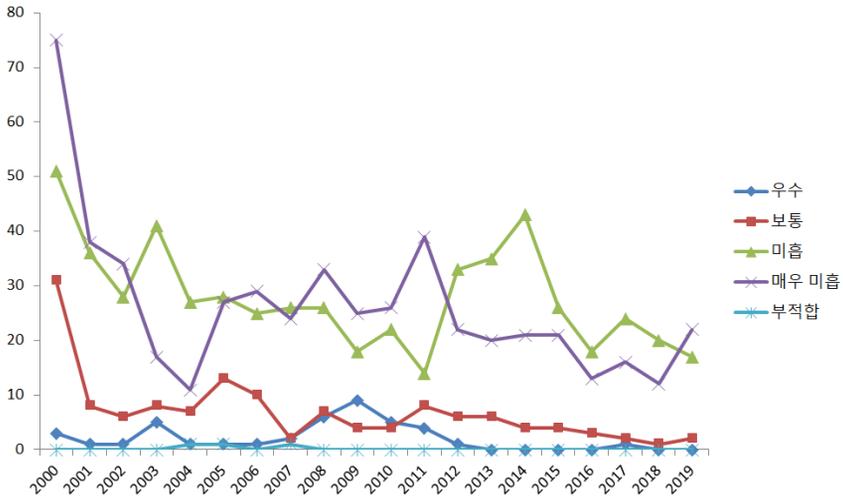
사업 연도 평가 결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총점	210점	25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220점	-
우수	3	1	1	5	1	1	1	2	6	9	5	4	1	0	0	0	0	0	0	0	0	40 (3.1)
보통 (양호)	31	8	6	8	7	13	10	2	7	4	4	8	6	6	4	4	3	2	1	2	2	136 (10.7)
미흡	51	36	28	41	27	28	25	26	26	18	22	14	33	35	43	26	18	24	20	17	558 (44.2)	
매우 미흡	75	38	34	17	11	27	29	24	33	25	26	39	22	20	21	21	13	16	12	22	525 (41.6)	
부적합	0	0	0	0	1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2)
소 계	160	83	69	71	47	70	65	55	72	56	57	65	62	61	68	51	34	42	33	41	1,262	
금지	57	31	33	35	18	24	21	9	-	-	-	-	-	-	-	-	-	-	-	-	-	228
공인 신청 취소	0	0	0	0	1	2	1	3	-	-	-	-	-	-	-	-	-	-	-	-	-	7
총 계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7	65	62	61	68	51	34	42	33	41	1,497	
현장 조사	70	26	18	18	15	19	15	13	18	19	19	34	12	12	15	6	7	9	6	5	356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신규 공인 신청된 종목의 평가 점수별 특성을 분석하면, 20년간 우수 등급을 받은 종목은 총 40개로 전체 1,262개 종목 중 3.1%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우수 다음으로 높은 등급인 ‘보통’ 등급 역시 20년간 총 1,262개 종목 중에서 136개 종목(10.7%)으로 ‘보통’ 이상의 등급이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은 각각 558개 종목(44.2%), 525개 종목(4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주무부처 공인 적합 종목 추천 기준을 보면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우수 등급을 기준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연도별 공인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연도별 평가 점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음.

[그림 4-2] 연도별 평가 점수 추이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2. 과년도 공인 적합 종목 추천 현황

- 2000~2007년까지 공인 조사 결과 양호(보통)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아 주무부처에서 공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종목 중에서 공인 추천 대상 종목으로 하여 2000년도에 34개 종목, 2001년도에 8개 종목, 2002년도에 6개 종목, 2003년도에 7개 종

목, 2004년도에 7개 종목, 2005년도에 12개 종목, 2006년도에 6개 종목, 2007년도에 3개 종목에 대한 심의를 직업교육·훈련 정책 심의회에 요청하였음.

-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직업교육·훈련 정책 심의회가 자격 정책 심의회로 변경되었고, 심의를 상정하는 업무가 주무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로 공인 추천 대상 종목을 선정하여 자격 정책 심의회에 심의·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3. 최종 공인 결과(2000~2019년)

- 자격 정책 심의회 이후, 최종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종목은 2000년도 28개 종목, 2001년도 7개 종목, 2002년도 5개 종목, 2003년도 6개 종목, 2004년도 6개 종목, 2005년도 12개 종목, 2006년도 6개 종목, 2007년도 3개 종목, 2008년도 7개 종목, 2009년도 11개 종목, 2010년도 10개 종목, 2011년도 4개 종목, 2012년도 6개 종목, 2013년도 5개 종목, 2014년도 3개 종목, 2015년도 5개 종목, 2016년도 4개 종목, 2017년도 2개 종목, 2018년도 1개 종목, 2019년도 2개 종목으로 총 133개 종목¹⁵⁾임.

15)16)17) 2019년도 공인 신청 최종 결과는 현재 주무부처에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최종 공인 결과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임.

- 이 중 2003년에 당시 노동부 소관의 회계정보처리사와 2005년에 행정자치부 소관의 정책분석평가사 등 2개 종목이 공인 취소됨. 그리고 2007년에는 조달청 소관의 구매자재관리사, 2010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재무설계사, 그리고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출금형제작사 외 11개 종목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한국어교육능력 자격 종목 등 총 16개 종목에 대해 유효 기간 만료 후 주무부처에서 공인 연장을 불허함. 또한 2011년에는 4개 종목이 추가로 공인되었고, 2012년 5월에는 1개 종목이 공인 취소되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1개 종목에 대해 공인 유효 기간 만료 후 주무부처가 연장을 불허함. 그리고 2013년 공인 유효 기간이 종료된 1개 종목이 제외되었으며, 2014년 1개 종목 국가기술자격 신설로 인한 검정 종료로 공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1개 종목은 재공인 조사 결과에 따라 재공인 연장이 되지 않았으며, 2015년 1개 종목이 재공인 조사 결과에 따라 재공인 연장이 되지 않았음. 2017년 2월에는 2개 종목이 공인 기간 만료 및 종목 폐지되었음. 2018년 1개 종목이 재공인 조사 결과에 따라 재공인 연장이 되지 않았음. 2019년 2개 종목이 공인 기간 만료되었으며, 3개 종목¹⁶⁾이 재공인 조사 결과에 따라 재공인 연장이 되지 않았음. 2019년 10월 기준 총 97개¹⁷⁾ 종목이 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인 민간자격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12개 기관, 2001년도에는 7개 기관, 2002년도에는 5개 기관, 2003년도에는 7개 기관, 2004년도에는 7개 기관, 2005년도에는 10개 기관, 2006년도에는 4개 기관, 2007년도에는 3개 기관, 2008년도에는

5개 기관, 2009년도에는 7개 기관, 2010년도에는 9개 기관, 2011년도에는 4개 기관, 2012년도에는 6개 기관, 2013년도에는 2개 기관, 2014년도에는 3개 기관, 2015년도에는 5개 기관, 2016년도에는 4개 기관, 2017년도에는 2개 기관, 2018년도에는 1개 기관, 2019년도에는 2개 기관이 민간자격 종목을 공인받음. 자격 폐지, 공인 취소 및 유효 기간이 만료된 기관들을 제외하면 2019년 10월 기준 61개의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이 총 97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공인율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음.

〈표 4-4〉 공인 민간자격의 연도별 공인율 현황

(단위: 개, %)

연 도	신청 자격 수		공인자격 수	공인율
	신청	재공인 (연장 승인)		
2000	217	-	28	12.9
2001	114	-	7	6.1
2002	102	6	5	4.9
2003	106	6	6	5.7
2004	66	7	6	9.1
2005	96	23	12	12.5
2006	87	15	6	6.9
2007	67	17	3	4.5
2008	72	12	7	9.7
2009	56	12	11	19.6
2010	57	29	10	17.5

<표 계속>

연 도	신청 자격 수		공인자격 수	공인율
	신청	재공인 (연장 승인)		
2011	65	31	4	6.2
2012	62	15	6	9.7
2013	61	35	5	8.2
2014	68	32	3	4.4
2015	51	29	5	9.8
2016	34	38	4	11.8
2017	42	29	2	4.8
2018	33	42	1	3
2019	41	39	2	4.8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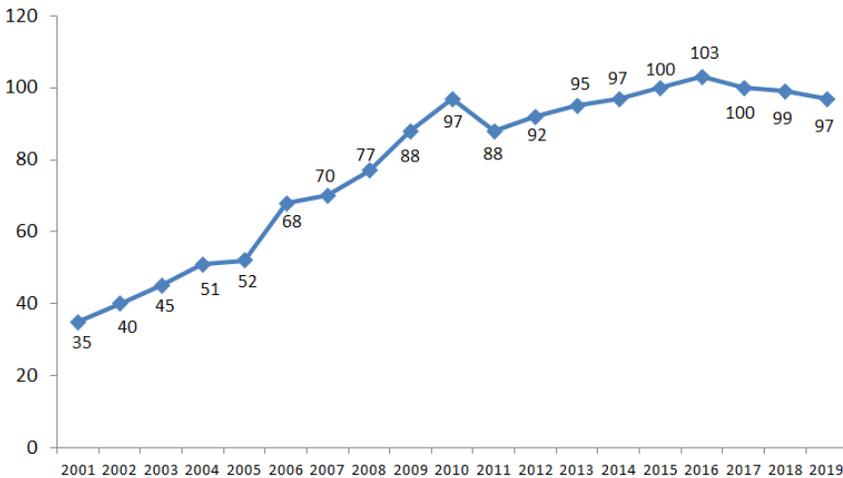
- 제도 시행 초기인 2000년에는 108개 기관에서 217개 자격의 공인 신청하였고, 이 중 28개 자격만 공인되어 전체 신청 자격 수 대비 12.9%가 공인되었음. 2000년 이후 20년 동안 3~19.6%의 공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¹⁸⁾
- 연도별 공인율을 살펴보면, 2000년 12.9%를 시작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8년 3%(33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1개 자격 공인)로 가장 낮은 공인율을 보였고, 2009년 19.6%(56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11개 자격 공인)로 가장 높은 공인율을 기록함.
- 연도별 공인율은 대체적으로 10% 전후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나타냄. 2019년의 공인율은 4.8%로 41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2

18) 이후 2002년부터 공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재공인 신청도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재공인은 기존 공인자격이 공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인 신청 자격 수 대비 공인받은 자격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인율 분석에서는 제외함.

개 자격이 공인됨.

- 전체적으로 연도별 공인 누계를 살펴보면, 이는 공인 민간자격 신규 추가 및 취소 만료 등을 반영한 수치로 2000년 28개 자격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 기준 97개로 20년간 약 250%의 양적인 증가를 보임.
- [그림 4-3]의 연도별 공인자격의 누계를 살펴보면, 등록 자격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달리 공인자격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이는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엄격하여 증가 속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4-3] 연도별 공인자격의 누계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제3절 2019년도 기준 공인 민간자격 관리 총괄 현황

1. 소관부처별 현황

- 2019년 10월 기준 공인 민간자격¹⁹⁾은 17개 부처 소관으로 97개가 운영되고 있음.
- <표 4-5>에서 소관부처별 분포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전체 공인 민간자격의 23.7%에 해당하는 23개 자격을 관리하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개 자격으로 전체 자격의 20.6%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가 11.3%,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8.2% 등의 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공인 민간자격별 소관부처 현황

[단위: 개, (%)]

소관부처	자격 수(2018. 10. 기준)	자격 수(2019. 10.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1 (1.0)
금융위원회	11 (11.1)	11 (11.3)
기획재정부	8 (8.1)	8 (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20.2)	20 (20.6)
교육부	25 (25.3)	23 (23.7)
법무부	1 (1.0)	1 (1.0)
행정안전부	3 (3.0)	3 (3.0)

<표 계속>

19) 2018년도 공인 신청 최종 결과는 현재 주무부처에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최종 공인 결과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임.

소관부처	자격 수(2018. 10. 기준)	자격 수(2019. 10.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6 (6.0)	6 (6.1)
농림축산식품부	1 (1.0)	1 (1.0)
산업통상자원부	9 (9.1)	8 (8.2)
보건복지부	3 (3.0)	3 (3.0)
고용노동부	1 (1.0)	1 (1.0)
국토교통부	3 (3.0)	3 (3.0)
관세청	1 (1.0)	1 (1.0)
경찰청	3 (3.0)	3 (3.0)
산림청	3 (3.0)	3 (3.0)
특허청	1 (1.0)	1 (1.0)
총 17개 부처	총 99개 자격	총 97개 자격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2019년 10월 기준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전체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소관부처: 17개
 - 종목 및 공인 등급 수: 97개/231개 등급
 - 자격 운영 기관: 61개 기관

2. 시행 기관별 현황

- 2019년 10월 기준으로 97개 공인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총 61개이며, 기관별로 관리·운영되는 공인 민간자격의 수는 <표 4-6>과 같음.
- 구체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10개 자격, 한국생산성본부가 8개 자격, 한국금융연수원이 6개 자격을 운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3개 기관이 총 97개의 공인 민간자격 중 약 24.7%에 해당하는 24개의 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표 4-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단위: 개)

시행 기관	자격 수	시행 기관	자격 수
대한상공회의소	10	한국생산성본부	8
(사)한국금융연수원	6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3	(사)대한민국의학연구소	2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2	한국세무사회	2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2	(사)한국정보평가협회	2
(사)한자교육진흥회	2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2
(사)보험연수원	2	매일경제신문사	2
삼일회계법인	2	한국경제신문	2
한국교육문화회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1	(사)한국정보관리협회	1
(사)신용정보협회	1	(사)법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1
(사)한국경비협회	1	(사)신용회복위원회	1
(사)한국농아인협회	1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1
(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	1	(사)한국분제조합	1
(사)한국수목보호협회	1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
(사)한국어문화	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
(사)한국열쇠협회	1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1
(사)한국정보화진흥원	1	(사)한국원가관리협회	1
(사)한국중이접기협회	1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1
(사)한국포렌식학회	1	(사)한국조경수협회	1
(사)한국인터넷진흥원	1		
(사)한국행정관리협회	1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1

<표 계속>

시행 기관	자격 수	시행 기관	자격 수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1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1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주)에스피평가아카데미	1	KBS한국방송공사	1
(주)피씨티	1	(주)와이비엠시사	1
대한정보통신기술(합)	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
도로교통공단	1	한국공인회계사회	1
한국농어촌공사	1	한국옥외광고협회	1
한국실내건축가협회	1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1
한국주거학회	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1
한국발명진흥회	1		

총 61개 시행 기관 97개 종목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공인 민간자격을 시행하는 61개 기관의 사업자 번호상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시행 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표 4-7>과 같음.
- 기관 유형은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으로 구분 가능하며, 이 중 비영리 법인이 53개 기관으로 전체의 86.8%, 영리 법인이 8개 기관으로 전체의 13.1%로 나타남.

<표 4-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단위: 개, (%)]

기관 유형	기관 수
비영리 법인	53(86.8)
영리 법인	8(13.1)
총 2개 분류	총 61개 기관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공인 민간자격을 시행하는 기관들의 등록 주소지는 61개 기관 중 53개 기관(86.8%)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4-8> 참조).
- 공인 민간자격 시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반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8개의 기관 중 충남과 전남, 강원 세 곳을 제외하고는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들이 모두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단위: 개, (%)]

시·도 구분	기관 수
강원	1(1.6)
경기	1(1.6)
대구	1(1.6)
대전	3(4.9)
서울	53(86.8)
전남	1(1.6)
충남	1(1.6)
총 7개 지역	총 61개 기관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제4절 2019년도 조사·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 분석

1. 민간자격 신규 공인 신청 현황

- 2019년도에 공인을 신청한 종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가. 공인 탈락 민간자격의 반복 신청

- 전년도까지 신규 공인을 신청하였다가 공인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민간자격이 전체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41건) 중 27건 (65.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금년도에 신규 공인 신청한 자격 종목 중 3회 이상 신규 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은 18건으로, 이는 전체의 43.9%임.

나. 기존 공인자격 관리자의 높은 공인 신청 비중

- 공인을 신규로 신청한 종목 중 9건(22%)이 이미 기공인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나타남.
- 반복적으로 공인 신청을 하는 종목·특정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특정 분야에 신청 자격이 편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향후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공인자격으로의 신규 진입 및 퇴출의 경직성

- 기공인 자격의 재공인 신청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9년도 기준 100%). 아울러 재공인 신청 기관의 상당수가 다른 공인자격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인 민간자격 제도에서 산업 수요 및 기관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공인자격이 진입 및 퇴출되기보다는 신규 진입된 공인자격의 대부분이 재공인 신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한번 진입한 공인자격의 경우 민간자격 시장에서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념하여 자격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라. 공인자격 운영 중단 사례

- 금년도 재공인 신청 과정에서 재공인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재공인 미신청한 기관은 없었음.
- 공인자격 제도가 2000년 이래로 20년간 진행되면서, 공인자격 만료 및 취소 사례가 증가하였고, 미신청으로 인한 공인 만료는 현재까지 공인 취소 만료된 34개 자격 종목 중 17개로 전체의 50%를 차지함.
- 특히 공인자격 운영 기관의 폐업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인 자격 취득자 정보 관리 주체가 부재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정보 관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자격 공인 조사 결과

- 금년도 신규 공인 및 재공인(연장 승인 포함) 조사·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신규 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 41건의 서류 심사 결과 5개 종목이 현장 조사 대상 기준에 부합함.
-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인 적합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2019년도 기준 2개 종목으로, 약 4.8%의 공인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4-9〉 최근 7년간의 공인 조사 결과 분석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3~2019년
신규 공인	신청 종목	61	68	51	34	42	33	41	330
	현장 조사	12 (19.7)	15 (22.1)	6 (11.8)	7 (20.6)	9 (21.4)	6 (18.2)	5 (12.2)	-
	공인 승인	5 (8.2)	4 (5.9)	4 (7.8)	4 (11.8)	2 (4.8)	1 (3.0)	2 (4.8)	22 (6.6)
재공인 (연장 포함)	신청 종목	35	32	29	36	29	42	39	-
	공인 승인	35	31	28	36	28	41	35	-

- 최근 7년을 기준으로 하면, 현장 조사 실시 비율은 대부분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9> 참조).

90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2019년은 2013~2019년의 공인 추천 선정 비율의 평균*인 6.6%보다 약 1.8%p 낮게 나타남.
 - * 공인 추천 선정 민간자격 수 /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수
- 공인 적합 선정 비율로 볼 때 매년 공인 조사·연구가 민간자격에 적정한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재공인 비율의 경우 2019년도에 공인 기간 만료로 재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 38건(연장 승인 제외) 중에 34건이 공인되어 89.4%임.
- 이는 최초 공인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민간자격 시장에서 독점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음.
- 공인자격에 대한 공신력 및 사회적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공인 자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함.
- 변경 승인 심의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총 4차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된 2개 종목이 ‘적합’, 2개 종목이 ‘부적합’ 판정되었음.
- 변경 승인 심의의 경우 공인자격이 산업 수요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 및 자격의 질 관리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심의하되, 최대한 기관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음.

제5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20년간 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제2절 공인 신청 및 조사·연구 기준의 개선

제3절 공인 민간자격의 의의 및 성과

제4절 후속 과제 제언

제5장 |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20년간 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1. 공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정부는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의 향상과 국가자격 간의 경쟁을 통해 자격 제도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공인 민간자격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 결과 다양한 산업 수요에 맞춰 민간자격이 운영되었고, 국민의 관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2019년 공인 민간자격 97개 종목, 공인자격 관리·운영 기관은 61개 기관에 이룸.
- 2010년 이후 공인 민간자격의 수는 약 100개를 유지하여 공인 민간자격 제도가 정체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됨. 이에 공인 민간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최영렬 외, 2016).
- 공인자격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인자격 취득자의 학점 인정, 채용 우대 등과 같은 다양한 공인 민간자격의 혜택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한편 등록 민간자격의 수는 현재 3만 개 이상으로, 등록 민간자격 제

도 시행 초기에 비해 그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산업에 필요한 분야의 자격이 공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처별 지정 공모 방식 등에 공인 신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등록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필수 연수 제도 마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인자격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2. 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사항

- 공인 신청한 민간자격의 공인율은 2000년 12.9%를 시작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8년 3%(33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1개 자격 공인)로 가장 낮은 공인율을 기록하였으나 대체적으로 10% 전후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2019년의 공인율은 4.8%로, 41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2개 자격이 공인됨.²⁰⁾
- 반면 재공인 신청 종목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인 기간 연장 적합으로 판정되고 있는데, 이는 공인자격의 신규 진입은 어려우나 진입 이후 재공인 조사·연구를 통해 공인자격이 만료 혹은 취소되는 경로가 경직되어 있음을 의미함.
- 공인 이후 자격의 시행 및 관리 부분의 질 관리가 주무부처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무부처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공인 조사·연구 지적 사항 및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20) 2019년도 공인 결과는 현재 주무부처에서 최종 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2019년도 공인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최종 결과를 확인하여 추후에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주무부처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인자격의 질 제고를 위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인자격 관리자 연수를 통해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인자격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 공인자격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일부 공인자격의 만료와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해산 및 사업자 폐업 등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정보 관리 주체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정보 관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제2절 공인 신청 및 조사·연구 기준의 개선

1. 공인 탈락 기관의 반복 신청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금년도에 신규 공인 신청한 자격 종목 중 2회 이상 신규 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은 27건으로, 이는 전체의 65.9%임.
- 금년도 공인 신청 종목 중 약 43.9% 정도는 전년도 공인 신청에서 부적합을 받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 신청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자격 관리자가 전년도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인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인 부적합을 받은 기관의 반복 신청은 행정상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인 신청으로 인한 신청 기관의 자격 검정 업무에도 업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에 공인 부적합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2. 민간자격 공인 조사 기준에 대한 검토의 필요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공인 조사 기준은 연속성을 위해 비교적 일관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금년에는 자격 관리자의 운영 방식의 변화와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선을 실시하였음.
 - 위임위탁 여부, 재위탁 여부, 위탁 사유, 위탁 관리·감독 방식

등을 추가하여 위탁 업무에 대한 주체와 책임 여부를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정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정 항목 심사의 전문성을 높임.
 - 자격 검정료와 발급 비용을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검정료 지급 이후 자격 관리자의 사후 관리를 구체화하도록 함.
- 이 외에도 자격 운영 방식, 신사업 및 정책 제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 조사 기준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3절 공인 민간자격의 의의 및 성과

1. 공인 조사의 의의

- 국가자격만으로 직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공인 조사는 민간자격 중 산업의 수요가 높고 관리 및 자격 수준이 우수한 자격 중 일부를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적 인력 양성 기제로 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인 조사는 공인의 기준을 국가자격 수준 또는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양질의 민간자격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특히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은 엄격한 기준과 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공인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 공인 조사의 성과

- 공인 조사를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인 민간자격이 대내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공인 조사의 큰 성과로 파악됨
- 이 밖에도 지속적인 공인의 질 관리 측면에서 공인 조사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됨. 2000년 이후 20년 동안 공인율이 3~19.6%를 나타내고 있어 공인 조사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인 민간자격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을 신청 편람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공인 조사 이후 지도 점검, 재공인 조사를 통해 그 수준을 유지·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공인 조사로 인해 민간자격 시장에 양질의 자격의 수준을 제시하고 민간자격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본 사업의 큰 성과로 파악됨.

제4절 후속 과제 제언

-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공인 민간자격 관리의 주체인 주무부처는 관리자적 입장으로 관련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격별 응시자 및 취득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자격별 활용 실태(취업률, 임금 수준, 교육 제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종합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자격별 관련 산업의 인력 공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자격의 활용성을 분석하여 일자리 연계와 자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구상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공인 민간자격 시장의 신청의 증감 추이,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인 민간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기능을 개선하며 민간자격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격 종목별 공인 신청 및 변경 승인 이력, 공인 신청서, 규정집, 공인 증서 등은 제출 및 시기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밀접하게 관련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DB를 세분화하여 이해관계자(직능원, 주무부처 및 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가 정보의 접근 수준에 따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

된 DB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격의 공인 이후 관리의 주체는 주무부처지만, 공인 및 재공인 자격을 위한 조사와 더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의 전반은 직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자격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공인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자격관리 주요 주체(직능원, 주무부처, 공인 민간자격 운영 기관) 간 정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참고문헌

- 김덕기 외(2015).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5)』,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김덕기 외(2018).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8)』,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 외(201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2)』,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 외(2013).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3)』,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 외(201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4)』,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서준호 외(2011).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1)』,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최영렬 외(2016).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6)』,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최영렬 외(2017).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7)』,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회 자료집』.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 큐넷(www.q-net.or.kr).

□ 저자약력

- 김덕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주인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최영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임경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원
- 이동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김상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정향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정지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이창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원
- 한애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위원
- 김윤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 발행연월일 2019년 12월 29일 인쇄
 2019년 12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나 영 선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339-7394-1 93320
- 인 쇄 처 (주) 범신사 (02) 720-9787

